

보도일시

2025. 11. 12.(수)

배포일시

2025. 11. 12.(수)

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고층화 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

- ☐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볼모로 한 개발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.
- 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,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.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하였다.
- ☐ 이는 유네스코 권고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으로, 세계유산 ‘종묘’의 경관과 역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.
- ☐ 국가유산청은 지난 2009년 이후 15차례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협의하며, 종묘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높이 기준(최고 71.9m 이하)을 유지해왔다.
- ☐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과의 기존 협의안을 갑자기 변경하고, 유네스코가 요청한 ‘세계유산영향평가(HEIA)’도 생략한 채 고층화 결정을 강행하였다.
- ☐ 아울러 유네스코 또한 세운재촉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.
- 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,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

적 목적으로 국가유산을 불모로 삼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.

□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으로,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“세계유산구역 인근에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한다”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명시했다.

- 세운4구역의 무분별한 고층화는 이러한 경관과 정체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.

□ 우리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세운상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.

- 다만,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상생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.

-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.

□ 만약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인해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자격에 대해 경고나 지정 취소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면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. 세계유산의 지정 취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, 향후 모든 문화유산의 보호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.

□ 우리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국가유산청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

- 첫째, 세계유산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보호체계 강화

- 둘째, 세계유산지구 지정 및 완충구역의 관리 강화

- 셋째,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 보고 체계 마련

- 넷째,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화 및 의무화 추진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개발 행정을 중단하고, 국가유산청 및 유네스코와의 협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가 단지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,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인 점을 각인하기 바란다.

2025년 11월 12일

 **민주당**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김교흥(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), 임오경(간사/정조위원장), 민형배, 박수현, 양문석, 이기현, 조계원, 김윤덕